

민주 오늘 의원총회...혁신안 갈등 심화하나

대의원제 폐지·현역 의원 페널티 강화 놓고 친명·비명 충돌 이재명 대표 "시간 두고 여론 모을 것"...논의 연기 목소리도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대의원제의 실질적 폐지·현역 국회의원 페널티 강화' 방안을 놓고,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정면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17일 이재명 대표의 총괄 출두 등이 있는 만큼 이날 의총안을 놓고 충돌하기보다 오는 28일 워크숍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15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의총 의총에서는 8월 국회에서 논의될 노란봉투법, 방 송법 등 현안을 보고하고 혁신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혁신안을 놓고 자유발언 등을 통해 계파별 의원들의 찬반 목소리가 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명 진영과 비명 진영에서는 이날 의총에서 밀린다면 이후 혁신안 논의 과정에서 계속 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경경 발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 10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을 삭제하는 등 대의원 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총선 공천 과정에서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를 통해 페널티를 강화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전·현직 다선의원들을 향해서는 불출마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당내의 친명계와 비명계는 연일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정청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명계에 맞서 비명계의 박광은 원내대표, 고민정·송갑석 최고위원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평등성과 1인 1표제가 민주당이 민주정당에서 적용되면 안 되느냐"면서 "김은경 혁신위원회(혁신안)의 전면 수용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친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했고,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김은경 혁신안은 집단지성이 만든 오렌 민주당의 혁신 의지 결과"라고 강조했다.

반면 비명계의 전해철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대의원제를 왜 지금 논의하느냐"며 "지도부가 취사 선택해서 당헌·당규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은 "일차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은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사퇴론을 재 점화하는가 하면 이 대표에게 맹종하는 그룹을 '곰팡이' 같은 부류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혁신안 논란과 관련, 이재명 대표는 "시간을 두고 여론 수렴을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친명계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시간이 문제일 뿐 친명·비명간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당헌·당규 개정은 모두 최고위, 중앙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 친명·비명 진영 간의 전면전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총선을 앞두고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논의를 연기하자는 목소리도 나온

다. 정책의총에서 혁신안을 논의하기보다 오는 28~29일 의원워크숍에서 혁신안에 대한 논의하는 것이다. 계파색이 열은 당내 최대의원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성명을 통해 혁신안 논의 연기를 제안한 바 있다. 대의원제 폐지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차원에서, 공천을 개정은 총선 관련 당 기구가 구성되는 시점에 논의하는 것이다. 정책의총이나 의원 워크숍에서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의견이 모아지면 논의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이 급부상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향배에 따라 민주당 내부의 계파 전쟁도 가닥을 잡아가지 않느냐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표가 구속 기소를 피하기 전까지 혁신안을 두고 당내 분란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면서 "혁신안도 이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며 "일단 16일 정책의총 결과가 혁신안 논의의 흐름을 결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민주 특별검사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집단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은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병사의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숨진 병사와 유가족,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관련해서도 "이번 사태의 성격은 중대한 권력 남용과 국가분란"이라며 "박 전 단장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그를 공익제보자로 지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의 항명 사건이 아니다"라며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고위 공직자들의 직권남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군 기장 붕괴 사건의 원인과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방위 개최(16일)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국방위 소집을 거부한다면 야당끼리만이라도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또 오는 18일 해병대 사령부를 찾아 김계환 사령관과 정중훈 부사령관, 현 광역수사대장,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면담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권 무능 감추기 묻지마 기소"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반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오는 17일 검찰 출석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페이스북 북을 통해 반론을 담은 진술서를 올리면서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 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현 정부 감사원조차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했지만, 나중에 무죄가 나온 말도 구속영장 청구 소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며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지금까지 그랬듯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시와 국토부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으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심지어 허가신청이 토지소유자의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게 배임죄라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 조건 없이 개발 허가를 내준 단체장과 장관들은 모두 배임죄인 것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벌써 네 번째 소환"이라며 "무능한 정치 검찰의 무도함을 널리 알려달라"고 했다.

한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사업 관련 인허가를 해결해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온 송영길 "검찰 독재 정권 탄핵 선봉에 서겠다"

진보중도보수연대 범국민대회 참석 민주당 각성 촉구...돈봉투 의혹 해명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민주당은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저와 함께 힘을 합쳐 윤석열·정지검찰 탄핵을 위해 온 몸으로 뛰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광주시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제7차 진보중도보수연대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예상은 했지만 검찰 독재 정권 1년3개월,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공정과 정의,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송 전 대표는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독재에 맞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분발을 촉구하고, "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회견에서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라고 일갈했던 김대중 정신을 되살리고 검찰 독재가 가슴을 찌르면 다가가 특재의 심장을 찔러야 한다는 노무현 정신을 생각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저의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발생해 거듭 송구하다"며 "제가 연루됐다면 저를 구속했을 텐데 입국 4개월이 지나도록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2008년 박희태 전 새누리당 대표 돈 봉투



15일 오후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제7차 진보중도보수연대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용빈 민주당 의원이 연사들의 연설을 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여야 오늘 행안위 김관영 지사 출석 신경전

여야가 8월 임시국회 개원일인 오는 16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해 대회 집행위원장인 김지사를 불러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이번 현안질의에서 잼버리 책임론을 윤석열 정부에게 떠넘기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야당은) 잼버리 주관기관인 전북지사 등의 출석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합의한 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만 16일 오전 전체회의에 불러 폭우 사태에 대해 묻지는 입장이다. 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질의는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이기도 한 이장관에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15일 입장문에서 "기합의원 16일 상임위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전북지사 등에 대한 현안 질의는 여당이 원하는 날짜에 별도로 잡으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주목성 뛰어나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화질 LED플라자 최고화질

-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률 최고!
-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아시아문화전당 앞 총장로 입구 공인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 높은 광고효과**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으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최적의 장소
- LED전광판의 특징**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원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암면 수문해수욕장 (울포해수욕장인근)

- 경관 수려, 다세대, 숙박시설·펜션 등 적합
- 445평과 210평, 도로 좋음, 평당 100만원

무안군 운남면 내리 3,940㎡ (1,191평)

- 공시가 45백 527천원 전원생활적합, 1억1,900만원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절 땅 4,650㎡ (1,406평)

- 공시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화순군 동면 장동리 (776평)

- 조용한 생활적합, 7,2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 투자 등 적합 1억5,500 (평당 10,778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 공고하오니, 영묘와 및 관제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의 개장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사 388-1번지
2. 분묘구수: 2기
3. 개장시유: 사유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① 유언분묘 - 영묘자와 협의 후 개장
 - ②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제명령에 의거 임의의 개장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장소: 전남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900 (장성군 추모공원)
7. 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
8. 공고일 및 연락처: 선양제010-3643-9566
9. 신고시 구비서류: 영묘자임을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보, 제적증명, 가족관계명세서)
10. 기타사항: 공고 후 무연분묘와 개장 증가 발생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감함.

2023년 8월 16일
위공고인 토지 소유주 신민재 010-3643-9566

산행안내

8월19일(토)
▲광주출발 8월 19일(토) (제65차) 정지산행 내연산 12회로, 소금강 전망대 트레킹 및 묘향 스페이스워크 오전 05시 30분 봉암동 롯데마트 주차장출발 05시 45분 간월동 육교 밑 05시 50분 백운-우재구 06시 롯데백화점 06시15분 광주에올의정당 푸른 010-4621-2166, 010-6702-9796 http://cafe.daum.net/gwangjuheseon

先州日報 지역안내

• 통 062-220-1900 • 통 062-220-1900 • 통 062-525-0761
• 통 062-222-8171 • 통 062-222-7858 • 통 062-266-7001
• 통 062-433-1503 • 통 062-433-1503

• 통 062-833-8838 • 통 062-222-0654 • 통 062-225-0001
• 통 062-222-9054 • 통 062-222-9171

• 통 062-833-8838 • 통 062-1833-1833 • 통 062-833-8838
• 통 062-605-6005 • 통 062-605-6005 • 통 062-605-6005

• 통 062-380-5788 • 통 062-372-2352 • 통 062-380-1625
• 통 062-7153 • 통 062-378-6511 • 통 062-603-0311
• 통 062-380-1625

• 통 062-1687 • 통 062-1620 • 통 062-973-2900
• 통 062-0451 • 통 062-944-0444